

'4+1' 공수처법 단일안...기소심의위 의결권 제외

백혜련안 기본으로 권은희안 '부분 수정' 반영 "초안성격...큰 틀 이전 없지만 세부내용 조율"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의 '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단일안을 마련하고 막판 조율 중이다. 4일 '4+1' 협의체의 공수처 단일안 초안을 보면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2개의 공수처법안 중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의안을 기본으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부분이 반영됐다. 다만 공수처에 설치하는 기소심의위의 권한이 '기소를 심의·의결하는 기구' (권 의원 안)에서 '기소를 심의·자문하는 기구' (단일안)로 다소 축소됐다.

당초 권 의원의 안에는 '공수처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기소심의위를 구성한다', '수사처 검사는 심의위 의결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한다'고 규정돼있다. 심의위가 공수처 검사로부터 수사 내용과 증거, 피의자와 변호인 주장 요지 등을 검토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의결하면 검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일안에는 심의위와 관련해 '공수처장은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기소심의위를 구성한다'고

만 적시돼있다. 심의위 성격을 '심의·의결'을 위한 기구에서 '의결을 듣기 위한' 기구로 수정해 넣었고, 심의위 의결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은 아예 삭제했다. 단일안의 경우 공수처 검사는 기소 여부에 대한 심의위 의견을 참고해 기소하되, 심의위 결정사항을 강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심의위 설치를 수용할 수 있지만, 기소 여부까지 심의위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배제돼 원칙에

어긋난다며 최종 결정은 공수처 검사가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쟁점이었던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임명방식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백 의원의 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단일안은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정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처장의 경우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처장 제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수처

검사 역시 처장 제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같은 단일안을 토대로 '4+1' 협의체가 본격 가동되면 공수처 차장·검사 임명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공수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심의위 구성방식을 포함해 추가 논의를 하게 된다. 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단일안은 '초안' 성격인 만큼 심의위 의결권 부여 문제 등을 비롯해 세부내용에 대해 '4+1' 협의체에서 최종 조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수처법 단일안에 대해 큰 틀에서는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지만 더 논의해야 한다"며 "법안 의결정족수(148명) 확보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여야 4당, 예산안 협의 시작... "수정안 마련"

내일까지 감·증액 취합 오는 9일 본회의 가능성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과 장당을 준비 중인 대안신당은 4일 내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정의당 이정미·평화당 박주현·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 관련 협상에 착수했다. 국회법이 규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기한(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513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원안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의원들과 현안 처리 논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이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뺀 이들 여야 정당은 4+1 협상을 통해 본회의에 올릴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감액 규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오는 6일까지 증액과 관련한 각 당 입장을 취합해 최종안을 내놓

기로 했다. 한국당이 마지막까지 예산 협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협상에서 확정되는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 앞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전해철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법

정시한(12월 2일)이 지난 예산안이 가장 시급해 4+1 협의체를 시작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의 협상 참여 가능성에 대해 "시한의 촉박함은 있지만, 원론적으로 한국당이 몇 가지 조건을 갖추며 얘기한다면 저희는 협의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검찰,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임의제출 형식 '유재수 검찰무마 의혹' 보고문건 등 확보 나선 듯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검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4일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유재수 전 부시장 검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 30분께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제110조)상 군사상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의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 전 부시장 검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찰 자료와 보고문건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특감반원

조사를 통해 당시 검찰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이미 상당부분 포착됐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감반원들은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인사담당 선임행정관이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한 정황 등을 확보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청와대는 해당 자료가 이미 폐기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민정비서관)이 회의를 통해 유 전 부시장 검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과 영전을 둘러싸고 '윗선'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들이 차례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당시 민정수석실 감찰 업무의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민주 '선거법' 한국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연기

군소 야권 공조 드라이브 결면서 협상도 준비

더불어민주당은 4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예산안·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동 방침을 공식화했다. 다만 '개입의 물'인 선거법은 제1야당과 협의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

직한 만큼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협상도 동시에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법,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본회의 날짜는 9일이 유

력하다. 그러나 선거법의 경우 상정은 미리 하되, 처리는 한국당 원내대표 교체 후로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4+1'로 강력히 기조를 흐트리자 말고 가야 한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선거법 같은 경우는 10일 통과가 안 되면 한국당에 협상을 제안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

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선거법은 어차피 9일과 10일에는 처리할 수 없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면 시간을 조금 두고 한국당 새 원내대표에게 선거법 협상을 제안해 받아들일 경우 합의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이런 기조를 잡아왔으나 공개적으로는 한국당을 비판하면서 '4+1' 협의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연풍문 앞 취재진.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취재진이 압수수색 물품 반출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장성토지 [급매]

광주에서 20분

(장성군청~장성댐사이)
⇒ 국도도로 12m(앞면30m)

- ① 평수 230평, 매매가 1억 6천만원
- ② 평수 1,080평, 매매가 10억

↳ **급매가 6억원**

⇒ 전원주택, 물류창고, 사무실 투자적합

■ 추천 물건

- ① 장성을 용강리 국도변접합(760평) → 매매가 8천5백만
- ② 장성 아은리(계획관리)500평 → 매매가 4억7천만원
- ③ 장성남면월정리(1093평) → 매매가 6억5천만
- ④ 장성필암리(담)925평 → 매매가 2억8천만
- ⑤ 담양을메다세웨아도로점(1470평) → 매매가 8억2천만
- ⑥ 광주서구서창(197평)시청에서20분거리 → 매매가 5억9천만

010-6670-9800

상가매매

- ① **광산구 첨단 쌍암동상가 10층 [24평]**
(대형동1, 큰방1, 부엌1, 화장실1)
- 주택, 사무실 적합, 즉시 입주가능, 울 리모텔링
- 매매가 7천 8백만원
- ② **치평동상가 6층~7층 [140평]**
(유흥주점, 카페, 노래방 적합)
- 콜롬버스 영화관 바로 앞
- 감정가 6억 5천만원 / 매매가 4억 2천만원
(보3천만원, 월280만원, 용지2억8천만원)
- ③ **치평동상가 7층 [60평]**
- 전망최고
- 감정가 2억 8천만원 / 급 매 ⇒ 1억 5천만원
- ④ **용봉동 원룸 매매 [물15개, 주택1]**
- 매매가 7억 2천만원
(보증금4천만원, 월수입450만원, 용지2억8천만원)

상가 임대

- ① **광산구 첨단 쌍암동상가 10층 [24] 평**
(대형동1, 큰방1, 부엌1, 화장실1)
- 주택, 사무실 적합, 즉시 입주가능, 울 리모텔링
- 보500만, 월40만원(용지3천만원)
- ② **치평동상가 7층 [60평]**
(Bar, 유흥주점, 카페, 노래방적합)
- 콜롬버스영화관 바로 앞
- 보1천만원, 월90만원

010-6670-9800

경매교육 [기초반·특수반]

- ① **기초 실전반 모집**
(무료강의 병행)
① 기초이론+실전
- ② **중급 실전반**
① 중급이론+실전
- ③ **고급 특수반 모집**

이제 특수경매만이 큰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 엔피엘)

※ 10억짜리 부동산 → 3억에 가능

- ④ **전문반 모집**
· 책상, 컴퓨터 제공
· 주1회 물건분석 스테디
- ⑤ **경매투자 연30%수익가능**
· 근저당 실시 연20% 가능

010-4667-9820